

오피니언

월/요/광/장

최협



깔끔한 시가지와 교통체증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음을 뜻한다.

여타의 도시에서 만나는 교통지옥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큰 매력 아닐 수 없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한 것이 국제화이다. 한 예로, 국제도시인 홍콩의 택시기사들은 약 60% 정도가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거의 100%가 영어 소통이 가능하다고 한다.

싱가포르가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택한 국제화전략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문화의 영역을 보면 싱가포르의 그들의 역사 문화적 콘텐츠가 많지 않고,

‘두리안’이라는 애칭이 붙은 예술센터가 들어섰고, 그 옆으로 역사문화지구와 호텔과 컨벤션센터, 쇼핑몰을 배치했다.

예술센터에서는 연중 내내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가들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컨벤션센터에 위치한 뮤지컬전용극장에서는 뉴욕브로드웨이의 공연이 동시에 진행된다. 그리고 최근 개관한 과학에술박물관에서는 고흐의 전시 때부터 첨단 영상과 음향기술을 접목하여 색다른 접근을 선보임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싱가포르는 확실하게 세계 집단의 시설들을 세계적 인재들을 동원하여 마련해 놓음으로써 아시아나 대양주의 사람들이 유럽이나 뉴욕에 가지 않고서도 공연예술의 정수를 접하게 하였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관광객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그 결과, 별 볼일 없던 평범한 도시 싱가포르가 불과 지난 10여 년 동안의 세월에 관광객이 찾고 싶은 문화도시로의 변천에 성공한 것이다. 광주가 문화도시로 성공하려면 우선 주민이 살기 편하고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개방’과 ‘포용’이라는 환경에서 문화적 토양이 풍요로워진다는 교훈이 여기에 숨어 있는 듯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전남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문화도시 광주·전남이 공연 불모지라니

문화도시 광주·전남이 공연예술의 불모지라 고 한다. 지역에서 유명 연주자나 단체들의 공연을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기획사들이 대부분 전주 공연까지를 추진하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광주 공연은 ‘패스’한지 오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행했던 문화행사 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이 받아낸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광주는 미술을 제외하고는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등 4개 장르 모두 전체 공연 횟수, 인구 10만 명 당 공연 횟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고, 전남은 국악을 제외하고는 언급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클래식 분야만 하더라도 지난해 국내 클래식 공연 7219회 가운데 광주는 103회로 충북, 충남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연극도 마찬가지다. 전체 공연 6만978회 중 광주는 276회로 16개 시·도 중 13위에 머물렀다.

광주·전남이 공연예술의 불모지라 된 것은 무엇보다 공연장이 적고, 규모나 시설이 열악하다는 데 있다. 광주의 경우 제대로 된 공연장이야 문화예술회관이 고작이며, 그마저 유명가수들의 공연에 밀려 대관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획사들이 돈벌이가 안 된다며 지역 공연을 외면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며, 문화를 향유하려는 자발적 의식이 결여됐다는 얘기다. 지역 예술인들의 소극적인 창작활동도 예외가 아니다. 관객을 끌 수 있는 창의적인 작품 제작을 찾기 어렵다.

문화중심도시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문화재단 등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매진해야 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시·도민들도 지역이 공연예술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역교단 명예 더럽힌 학생부 무더기 조작

대학입시의 핵심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광주·전남지역 교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지역교단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물론 대입의 신뢰성과 공정성, 객관성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64개 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학생부를 조작한 사례는 1466건(39개교)이었고, 관련 교사도 217명이나 됐다. 또 이들 외에 교장 등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도 117명에 달했다. 전남지역 156개 고교에서도 255건(28개교)의 조작 사례가 나왔으며, 교사 56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부 조작은 대입에서 유리하도록 부정적인 내용을 없애고, 장래 희망을 3학년 때의 것으로 대부분 꾸며냈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한 사립학교에서는 500건이 넘는다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학생부는 성적, 특별활동, 진로지도, 담임평가 등 학생의 교육과정을 망라한 종합 기록이다. 이를 수정할 때에는 교

과부 훈령에 따라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결재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교사들이 이를 어겼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학부모들이 대입을 이유로 정정을 거듭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학생부 조작은 전형에서의 불공정성은 물론 신뢰와 정직을 가르쳐야 할 교육현장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비교과 영역인 학생부는 입시에서 수능성적만큼 중요한 전형요소다. 더구나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전형에서는 결정적인 변수다. 그런데도 허위 학생부가 전형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해 당락을 갈랐다면 낙방생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원칙을 지킨 선의의 학생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학생부 조작은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 교육청은 관련자들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동일 범죄의 재발을 막고 공교육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조선은 전제군주국이었지만 조정의 정책이 잘못되었을 경우 유생(儒生)들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다. 왕에게 글로써 자신의 뜻을 전하고 청원하는 상소(上疏)제도 덕분이었다.

집단 상소는 초기에 수백명 규모였으나 18세기 말 이후에는 1만 명 안팎이 연명한 상소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만인소(萬人疏)다. “만 사람의 뜻은 곧 천하 모두의 뜻”이라는 명분을 담은 강력한 여론 괴력 수단이었다.

최초의 만인소는 정조 때인 1792년 이우를 소두(疏頭)로 영남유생 1만57명이 사도세자의 신원(伸冤)을 청원한 것이었다. 순조 때인 1823년에는 전국 유생 9996명이 서얼도 차별없이 임용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개항 뒤 조정의 개혁정책에 반대한 척사론자들이 1881년 고종에게 올린 영남만인소다. 이들은 “러시아·미국·일본 등은 모두 오랑캐여서 차이가 없고, 그들이 조선에 들

어와 통상과 토지를 요구하면 조선은 발발일 곳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은 이후에도 국가 위기에 처하거나 국민들이 폭압에 신음할 때면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1960년 이승만의 하야나 노태우의 6·29선언에도 대학교수 등의 시국선언이 큰 역할을 했다.

한동안 뜸했던 대규모 시국선언이 이만 바만소(萬人疏)다. “만 사람의 뜻은 곧 천하 모두의 뜻”이라는 명분을 담은 강력한 여론 괴력 수단이었다. 최초의 만인소는 정조 때인 1792년 이우를 소두(疏頭)로 영남유생 1만57명이 사도세자의 신원(伸冤)을 청원한 것이었다. 순조 때인 1823년에는 전국 유생 9996명이 서얼도 차별없이 임용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개항 뒤 조정의 개혁정책에 반대한 척사론자들이 1881년 고종에게 올린 영남만인소다. 이들은 “러시아·미국·일본 등은 모두 오랑캐여서 차이가 없고, 그들이 조선에 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법조칼럼



조은수

변호사로서 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작가 존 그리섬(John Grisham)의 소설 고백(The Confession)은 사형제도와 형사제관과 사회적 편견, 진실을 대하는 검사의 태도 등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게 한 소설이다.

소설은 캔자스 주 어느 작은 교회에 트래비스 보이엇이라는 뇌종양 환자가 찾아와 고백을 하면서 시작된다. 가석방 상태인 보이엇은 수차례 강간을 저지른 중범죄자로 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를 하였고, 그는 뇌종양으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실에 임하는 검사의 자세

고 하면서 주인공인 목사에 9년 전의 사건에 대하여 고백을 시작한다.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 슬론, 열일곱살의 백인 고등학교 차어리더 소녀인 니콜이 실종되었고, 시체도 사건의 실체도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은 같은 고등학교 미식축구선수였던 흑인 소년 돈테드립을 살인범으로 지목한다.

백인의 흑인에 대한 증오감과 편견, 유대 신문과 거짓 자백, 수사 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의하여 돈테드립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아무도 자신의 무고함을 들어주지 않는 답답함에 싸인 채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9년의 세월이 흘렀다.

예정된 사형 집행일 4일 전, 보이엇은 자신이 니콜을 강간한 후 살해하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시체를 묻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청년인 돈테드립이 고스란히 누명을 썼다고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보이엇의 고백을 들은 목사는 진실을 밝혀 무

고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보이엇과 함께 텍사스로 향하게 된다.

진실을 알고 있으나 자신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 사실을 밝힐 용기를 내지 못하는 중인, 돈테드립의 사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9년여간 헌신한 변호사, 돈테드립을 처형하는 것이 바른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검사와 경찰, 자신의 그릇된 판단이 옳다고 믿는 판사 등이 등장하면서 소설은 과연 돈테드립에 대한 사형이 그대로 집행될 것인지와 두고 긴장감 있게 흘러간다.

이 소설은 나에게 사형제도의 존치문제, 형사절차 내에서의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의 문제에 대하여 화두를 던져 주었고, 특히 정의를 밝히는 형사제관의 본질과 진실에 임하는 검사의 태도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흑어 검사인 필자 역시 자신만의 벽에 가

<광주지검 검사>

기고



황신하

올해는 지방자치체가 시행된 지 20주년 이 되는 해다. 역사적으로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이후 새로이 부활하기까지 무려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정확히는 1991년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단체장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광주시도 어느새 민선 5기에 접어들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기치로 순조로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 많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밀립을 만나면 밀립을 개척하고 사막을

지방자치 시대의 힘은 재원이다

만나면 사막에 우물을 파라고 했던가. 풀기 어려운 문제는 있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는 법이다. 물론 시민과 기관이 뜻을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비단 광주시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 ‘자주재원 확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시장의 기초는 재원이며,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향상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모든 문제의 근간이 바로 재원이다. 그래서 재원확보는 지자체의 필수불가결한 목표이자 나아가야 할 이정표임에 틀림없다.

최근 몇 년간 지자체가 겪는 재정상 어려움의 원인을 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나 그에 따른 보조율은 감소하고, 더불어 이러한 국가사업이 지자체로 편입되어지면서 지방비 부담이 늘었고 때

이다. 또 지방자치 도입 이후 시민의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비 지출은 늘었으나 불안정한 세계경제와 국내 경기침체로 세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지자체의 재정난은 한층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이뿐만이. 중앙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줄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 과세비중이 높은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지자체 재정난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해법은 간단하다. 바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주재원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 또한 늘려 가는 것이다. 지자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으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를 기반으로 한 재정자립도가 턱없이 낮다. 광주시의 올해 세입예산 규모는 2조3천억 여 원으로, 이 중 의존재원은 53%이고 자체

재원은 45%에 불과하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만큼 국가로부터 많은 재원을 끌어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재정자립도만으로 지자체 재원을 평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당한 편견이다.

그러서 중앙정부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3년부터 10%로 인상할 계획이나,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고 더불어 2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또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각 지방의 재정력에 따라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방소득세의 과표기준을 현행 소득세액이 아닌 소득액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화를 조기에 시행해야 하며, 이 밖에 도 국세의 지방에 재정력에 따라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재정자치가 이뤄져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광주시 세정담당관>

농촌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애국가 시험 배려 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건 우리나라 유치원생도 큰 어려움 없이 부르는 애국가 1절의 첫 소절이다. 고향에는 두 명의 베트남 출신 주부가 시집을 와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애국가 때문에 항상 힘들어 한다.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들은 필기시험이 다행히 면제다. 그 대신 5단계의 면접을 통과해야만 법적으로 한국인이 될 수 있는

데 결혼이민자들은 그 중에서 애국가 면접이 가장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평가의 경우 항목별 중 60% 이상 답변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적합 판정을 받지만 애국가는 상황이 다르다. 애국가 1절을 음과 가사가 틀리지 않고 완벽히 소화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농사일을 하면서 애국가를 따로 배우기 힘들어 아예 노래방까지 찾아가서 배우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 멀리 읍내에까지 차를 타고 나가 노래방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애국가를 배워야만 하는 고충이 클 듯하다.

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다시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면접에서 탈락해 한국국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면 당장 자신의 친척을 초청할 수 없다. 취업규제도 받고 선거권도 주어지지 않고 금융거래도 쉽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체류신사를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빈번히 출입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귀찮을까. 이 분들의 애국가 시험을 보다 좀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할 방법은 없는지 우리 농업인 단체와 정부에서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세리·광주시 동구 서석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광)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